

“무등산 약수터 빗물 방지시설 만들라”

무등산 약수가 인체에 해로운 세균에 오염된 이유는 빗물이 스며든 때문이며, 빗물이 약수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약수터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관 광주시 수질연구소장은 15일 광주시청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영관 광주시 수질연구소장 심포지엄서 주장

◇비 많이 오는 여름철 오염 심해=조 소장이 세미나에서 공개한 '2005년도 광주의 약수터 및 공동우물의 수질'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9월말 기준) 무등산 약수터 12곳 중 2곳(옛 중심사 관리소·산장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이 부적합 수질 판정을 받았다. 1·4분기에는 2곳이, 2·4분기에는 3곳만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여름철 세균 오염 크게 증가

광주시가 올해 3·4분기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약수터 모두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마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4분기 때는 10곳이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조 소장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7~8월)에 지하수의 세균 오염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DB 구축 시급

광주시는 당초 약수 오염이 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약수가 표층수인데 ▲동물들의 배설물이 섞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청풍원터 등 일부 약수터는 지하수인데도 오염이 계속돼 의문이 제기됐다.

◇지하수 관리도 시급=약수 대부분이 지하수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소장은 세미나에서 “광주시가 지하수 폐공(廢孔·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취된 우물)을 복구하는 작업은 전국에서 가장 잘 진행 중이나, 지하수의 통합관리체계는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수는 보전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에는 부존량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시, 철조망·살균기 등 설치키로

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또 GIS(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수문지질도’를 작성, 지하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에는 총 5천700만㎡의 지하수가 개발가능하며, 현재(2004년 말 기준) 43.8%인 2천500만㎡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시는 약수터의 수질을 되살리기 위해 ▲각 약수터의 저류조 보수 ▲철조망 설치 ▲살균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너덜길 약수 등 9개 표층수의 저류조를 보수한 뒤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산장광장 등 4곳엔 자외선 또는 오존을 이용한 살균기를 설치해 소독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푸른광주 조성 '자기나무 심기' 광주시가 15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개최한 '가을철 시민 자기나무 갖기' 행사.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푸른광주가꾸기·도우미·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 느티나무·단풍나무·철쭉 등 1천여 그루를 심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온실가스 의무 감축’ 주의제로 다뤄

■ ‘기후협약’ 쟁점·전망

11월 6일~18일 케냐에서 열고 있는 ‘제1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연차 총회(COP12)’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가입 시기를 앞당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회에선 ▲선진국 41개국(부속서 I국가)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2013년부터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EU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감

선진국, 개도국 가입 요구하며 對韓 압박 한국 가입 여부 2008년 이전 결론날 듯

축 의무 대상을 개도국으로 확대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포스트 교토 체제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의 추가 감축 의무 비율을 정하는 데 주력하고 선진국들이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재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세계 10위에 올라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요구에 직면해 있고, 1차 공약기간 중인 2008년까지는 의무 감축 대상에 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작년 2월)가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기후변화대응 정부간 패널(IPCC) 4차 평가보고서’가 2007년 발간될 예정인 점 등을 내세워 교토의정서 상 기술 이전 문제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의무 감축 문제가 당사국간 이견으로 공식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불산단내 환경위반업체 4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5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체 4곳을 적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10월31일~11월3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불산단내 콘크리트와 레미콘 제조업체 ‘C산업’·‘S콘크리트’·‘C개발’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방치됐거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었다.

또 선박 구성부품제조업체인 ‘K사’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영암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관련 신규 사업장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불법적인 주변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9-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다문화지원센터 보건복지부지원센터 671-4050 광주 YM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청년 1388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제청 1588-0060 병무인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MCA 524-5400 주부요선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소 369-9881	신고 학교폭력 국민청년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센터 02711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직원상담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0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국민청년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민청년 1389
---	---	--

수술입고 척추디스크 거뜬히 치료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생활양식 및 생활에 만족

천지인한방의원

천지인한방의원은 척추디스크 치료에 특화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수술 없이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생활양식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간독소의 주범 술과 스트레스

간독소를 예방하는 방법은 술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간독소는 주로 술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술은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절제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동한의원

영동한의원에서는 간독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